

내년 국가재정 “건전재정 필요” vs “AI 대전환 맞춰 증액”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공청회

2060년 국가채무비율 81.1% 전망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줄여야

韓 경제 정체… 예산 대폭 증액 필요
AI 인프라 구축에 돈 ‘결정적’ 중요

여야가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10월 31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전환의 시기’에 놓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거나, AI 대전환의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재정을 대규모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나라살림 씬셈으로는 탄소중립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정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강화된 건전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행정부의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보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60년 5.8%까지 줄여야 한다. 만일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2024 국가재

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인 14.3%로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298%에 달한다”며 “조금 현실화해서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경상성장률 느리게 증가시켜도 국가채무비율은 지금보다 세 배 높은 153%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향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 “첫째, 국가신용등급이 지금보다 떨어

지고, 둘째,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셋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며 “종합해보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 성장 경로 확보를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랩2050의 이원재 이사는 한국경제가 침체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체하고 있고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표적 대기업이 정체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인다.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 3.2%,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 0.8%이기 때문에 전략적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예산안”이라며 “지금 같이 중요한 때에 AI 시대에 맞는 전환

을 해내기는 어렵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AI시대의 자본 투입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 이사는 “인프라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 부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산업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며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대량 구매해 장착해야 하는데, 구매해서 장착할 만한 돈이 없다. 있다 해도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선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지만, 여야는 야당 주도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 처리 예고에 대립하며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매년 11월말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당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높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영선 좀 해줘라’ 했다”… 민주당, 尹 ‘공천개입 의혹’ 음성 공개

〈전 국회의원〉

尹-명태군 통화 추정 파일 공개
2022년 재·보선 등 뒷거래 가능성
대통령실 “공천 지시한 적 없어”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명태군 씨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공천을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판단이 어렵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윤 대통령과 명 씨로 추정되는 이들의 통화 음성이다. 이 녹취는 명 씨로 추정되는 이가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군씨의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자체 제보센터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이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했다. 이에 명 씨로 추정되는 이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전인 5월9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회장에 공천돼 당선됐고,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체 특감 임명따위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고,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녹취 공개에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회장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군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기색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녹취 관련 질문을 받자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추가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사무총장 등 당무를 보는 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현재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무감사 등은 원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 기자 syj@

이재명 “대남방송 피해 보상 되도록 할 것”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민방위기본법 개정해 기회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31일 북한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한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회 국

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모인으로 출석해 “방송 소음으로 인해 저희 일상은 무너졌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며 무릎 꿇고 국방위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방송재개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와 관련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2020년 6월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으나, 올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을 재개했고, 곧 북한도 대남방송을 다시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며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선거 때 약속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다”고 했다.

민방위기본법 제32조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구조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등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태홍 기자

尹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예산, 5.9兆 편성”

‘2024 韓 소상공인 대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와 은행이 협업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의 신규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드릴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두 배 늘려서 1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추가지원(25만원), 온누

리상품권 판매량 확대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참석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